

##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대학교육개혁의 기독교적 고찰\*

박 문 식(한남대학교 기계공학 교수)

### 논문초록

IMF 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정부의 강력한 행·재정적 지원 아래 주목할 만한 개혁 과제들을 진행시켜 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된 구호들은 연구중심, 지역혁신, 산학협력, 평가인증 및 선택과 집중 등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자원공모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고등교육 재원이 되었기 때문에 대학들은 생존과 연관 지어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선정대학 평가에 사용되는 정책지표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학의 구조 및 교육과정의 방향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따라서 정부의 대형 프로그램들의 구호와 정책지표 및 운영방식들은 대학의 교육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하여 위기적 요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대학교육에 미친 효과 및 비판들과 특히 교육의 본질적 요소의 관점에서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들이 안고 있는 논의되지 않은 이슈들을 도출하고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비판한다. 10년에 거친 대학개혁 프로그램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경쟁력은 별로 향상되지 않았으며 교육과정은 경시되고 대학개혁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기독교에서는 고등교육이 수요지향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여 문화명령의 사명자가 되도록 요구한다. 나아가 기독교적 교육의 지향들은 우리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전망을 제시한다.

주제어 : 대학교육개혁, 대학교육과정, 대학자주성,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적교육지향

### 1. 서론

교육은 문화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당대의 주류적 문화적 상황위에서 교육이

---

2010년 3월 31일 접수; 9월 14일 수정; 9월 23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10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집필되었음.

계획되고 실행되어진다. 인류문명의 발전이라는 대 전제아래에서 교육은 반드시 미래를 지향해야 하며 따라서, 끊임없는 현상의 검토와 성찰을 통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창조를 시도하고 만들어 내야 함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은 역사성의 바탕 위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비전과 이념과 기술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들은 문화비판적인 식견과 사회적 책무성 및 그 피교육자들인 학생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교육과정들은 대체로 현대문화의 지향성을 의미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며, 교육자들은 분업화 되고 집중화 되어 경쟁력의 고삐로 옥죄 전문가의 좁은 길로만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수는 일부 과목을 심도 있고 의미 있게 가르쳐내는 강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 이외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교육의 문화적인 관계성과 학생의 다양한 배움의 측면을 고양할 줄 알고, 졸업 후 이어지는 일생을 통하여 은사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자 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교육열이 높지만 그에 걸맞은 교육제도나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건전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맞보기 시작하던 1997년, 뜻하지 않은 IMF 구제금융사건을 계기로 변화의 몸부림들이 나타났고 특히 고등교육분야에서 정부는 대학들에게 혹독한 갱신의 과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은 자유와 민주화의 상징에서 급격히 성과주의와 시장경쟁에서의 생존과 같은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마치 성과와 평가를 정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정책들을 내어 놓고 있고 이에 대해 입법부는 그 정신에 연합하고 있는 듯한 법률개정들로 동조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대학 개혁 프로그램의 신호탄은 1999년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자는 두뇌한국

21(BK21) 사업이었다. 이는 구조적으로 수도권의 대형 대학들에게 유리한 것이었고 선택된 대학들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 보다는 규모가 작고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비판과 전망들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2003년에는 국가균형발전이야 말로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는 비전아래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기업의 성장동력이 되게 하겠다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각종 지침들을 첨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는 그 기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BK21사업은 연장되어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정책이 수년간 공존하게 되었다.

대학의 특성화와 산학협력은 대학의 발전과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학협력중심대학과 기술혁신센터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각종 연구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한편, 교육인증 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주로 교육의 수요자를 기업으로 설정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의 질 제고라는 차원에서 교육과 그 운영을 표준적으로 규정하고 수준을 끌어 올리자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는 공학교육인증과 경영학교육인증이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특성화와 산학협력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모든 대학들에게 표준적으로 제시되는 교육인증 제도와는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수 대학들은 둘 다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에 이르러서는 외환위기와 정부주도의 대학개혁 드라이브의 10년을 지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재정의 선택과 집중의 방법을 달리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과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둘째로는 대학에 대한 정보공개와 평가에 대한 책무성 부여의 일환으로서 각종 법제화를 시행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만들어 졌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대학개혁 시책들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분석과 비판이 진행되어 왔다. 주로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은 국책기

관들에서(고형일, 2006), 그리고 정치학적 또는 교육행정학적 분석과 비판들은 여러 학술기관을 통한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제시되고 있다(정일환, 2004, 신재철 2007). 이들은 대부분 그러한 시책들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대학에 적용되어 그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각종 정부 주도 프로그램들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행정적으로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그것들이 대학교육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적실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각종 정부 정책들과 대학들의 대응이 우리가 경험하는 대학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들을 기독교적으로 조명해 보고자한다.

## II. 본론

### 1. 정부의 대학교육개혁에 대한 고찰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IMF 구제금융사건을 기화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긴장감과 구조조정의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된 때이며, 정부와 기업의 단기적인 대응과 아울러 고등교육 특히, 대학원교육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시기였다. 여기에는 소위 재래산업 또는 굴뚝산업시대에서 지식정보시대로의 전환을 갈망하였던 IT산업의 부흥의 성과에 고무된 바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적 비전으로서의 미래 국가적 일거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당시 대학 및 대학원의 낮은 국제 경쟁력으로는 어렵다고 보아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창의적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을 목적으로 1999년 BK21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대학교육의 개혁정책에 대한 고찰의 시점을 굳이 IMF사건 이후로 잡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임연기, 2005) IMF는 내수경제가 외국환을 매개로 하는 국제경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음을 시사 하였고, 사회전반에 걸쳐 국제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화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시급성은 금융 및 경제 분야에 있었지만 그 근원적 문제의 해결은 국제화 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의 양성이라는 점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IMF 이후 대학교육의 정책적 지향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으며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의 교육정책은 강력한 행·재정적 구조적 지배역량을 극대화 하여 진행되었다. 정부 정책의 개념은 국제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IMF 이전의 정책방향이 주로 당시의 후진적인 대학환경을 '진정한 학문적 수월성을 갖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BK21사업은 1995년 이른 바 5·31 교육개혁에서 정부가 주도하고자 했던 산업화 교육모델로부터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정보화 및 국제화를 지향하는 세계화 교육모델로의 교육개혁을 추구한 이래로 처음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책적 의도를 가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김안나, 2005 ; 신재철, 2007). 이 때 부터 정부는 평가와 연계된 차등재정지원방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형평성 보다는 수월성을 강조하게 되며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국가역량을 높이고자 대통령과 정치권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등장하였다.

BK21사업은 상위권 대학원의 우수 인력확보와 학문 후속세대들의 연구의식 고취에 큰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비 지원이 주로 교수의 연구력과 역량을 강화시켰다면, BK21사업은 대학원생과 젊은 학자들의 연구의식을 크게 고취시키고 그 소속 대학원의 체질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국제급 논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생산성 지표향상 유도로 말미암아 대학가에 SCI급 논문 생산의 풍도가 조성되었으며 논문계재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양적 성장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행초기부터 불명확한 목표와 시행상의 문제점, 학문발전과 대학 발전시책으로서의 근본적 한계점 등에 있어서 행정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김병주, 2007).

정권과 함께 전략적으로 정책화되어 추진되어 온 정부의 여러 고등교육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여건은 더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대학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지방대학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는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로 학생충원이 어렵고 학문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화되었다. 또한 산업의 구조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하여 대기업은 수도권 대학에서 쉽게 인력수급을 하는 반면 지방대학에서 배출되는 고급인력은 수급되지 못하는 극심한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소위 고급인력을 수용할만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육성되지 않았거나 해외로 떠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2003년 누리(NURI)사업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역량을 키움으로서 지역발전 도모와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산업체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사업단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지방 핵심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즉, 광역단위의 지역혁신 클러스터에서 우수한 인력을 수도권에 빼앗기는 일이 없이 산학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해당 지역의 우수 기업에서 채용함으로써 선순환을 기하여 명실공히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대학의 여건지표의 취약성을 간과하고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의 정책지표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이 교수의 연구보다는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지원, 교육비지원, 산학협력 및 맞춤형 교육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지표들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대학내에서의 학문분야간의 통폐합과 대학간의 통합 등 주로 입학정원은 줄이면서 교육여건은 대폭 개선시키는 구조조정의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도 염원했던 산학협력과 지역혁신클러스터링의 선순환은 지방대학들의 산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누리사업대학의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누리사업의 수혜로 졸업한 기름진 학생들이 누리사업에서 의도했던 지역 기업체로 취업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수도권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공무원, 공기업이나 청년실업자의 길로 내몰리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누리사업은 교육의 수월성은 잃지 않으면서도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여준 사업이었다. 그리고 지방

대학의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산업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문제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누리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에는 이를 수 없는 한계점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유현숙, 조영하, 2007). 이는 지역 산업의 보편적 수준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지역혁신클러스터링은 지역산업의 협력수준과 인력 수급능력을 끌어올릴 때 까지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사업은 지역별 산업단지를 육성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을 8개 권역 산업단지로 묶고, 기업에게는 R&D를 지원하면서, 대학에서는 맞춤형 인력을 제공할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즉, 단순 생산위주의 산업단지를 지역거점대학을 R&D센터로 활용케 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지도, 공용장비센터,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과 고유설계가 가능한 고부가 산업단지로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과대학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원방식과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거점 공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주요 대학들은 목표와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 정부의 대형 프로그램인 BK21사업 또는 누리사업과 병행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들간의 서로 다른 지향 때문에 정책적 지향의 혼선을 가져다 주었고, 수혜 대학들은 백화점식 교육체제를 더욱 고착화하게 되었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1981년 학술진흥재단이 설립되고 1983년부터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비의 위탁을 맡은 이래로 대학에 학술연구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분야의 선정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IMF 위기와 BK21과 누리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과의 역할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운영방식과 관리방식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과학기술부 연구비의 위탁까지를 위임받으면서 명실상부한 학문진흥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특히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 정책적 육성분야와 소외학문분야를 함께 지원하며 신진교수연구지원 및 자유공모과제 등을 두었고 각종 학술기관 및 교류 등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 옴으로서 그 지

위와 위상은 강화되었다. 또한 정부의 수월성과 효율성 정책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정책으로 인한 학문분야 간, 지역 간 및 세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연구자 선정 및 연구비 배분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학술지원정책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이 빈약하고 정책수립과 선정평가를 위한 정보의 비대칭문제가 존재하였다(김민희, 2007). 그리고 개별 연구자 중심의 지원방식과 논문의 정량지표를 위주로 하는 성과주의는 학문의 분업화 내지는 과편화를 조장하고 논문을 위한 논문을 양산하면서 진정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거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발전으로 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한편 대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도 있어왔는데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학문분야평가와 여러 교육인증제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학문분야평가는 행·재정여건과 교육 및 연구성과 부분이 반영이 되는 종합평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교육인증평가는 교육과정과 자율 순환적인 교육개선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교육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하계도 이러한 기관들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평가 및 실사를 받을 때, 마치 정부기관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것은 이러한 기관들이 대학의 형편이나 의견들을 반영하기 보다는 정부와의 협약 또는 위탁관계를 내세우며 소위 여타 국책사업에서의 재정지원연계방식의 평가권위를 내세운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각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평가기준이 마련되기 보다는 기득권적 지위를 갖는 대형 종합대학에 어울리는 획일적인 지표들을 설정하고 그 평가결과의 사용에 있어서도 해당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서열화에 이용이 되는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평가로 인하여 교수는 교육과 연구의 본질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하여 과중한 평가보고서 준비와 행정 부담으로 오히려 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9년 시작된 공학교육인증은 그 필요성을 공과대학 졸업생들의 품질에 대한 산업체의 불만족에 두면서 공식적인 성과로는 교육과정을 통한 CQI(지속적 품질



개선)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 문제해결의 방법으로서는 공장에서 잘 알려진 ‘품질보증기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 기본개념을 요약하면 성과중심, 수요지향, 세계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의 질 개선에 있어서는 각 대학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학점제한, 획일적인 설계과목 개설 강요, 학문분야에 무관한 기초수학과학 제시, 교양교육과의 충돌 등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최적의 사례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김희동, 지인영, 2009). 특히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요구하는 학습성과는 12개로서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설립이념이라든가 교육목표, 특성화 및 산학협력 등과는 상관이 없는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전제로 하게 됨으로서 교육철학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공학인증제의 도입이 각 대학의 발전과 차별화에 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학벌우선의 풍토가 여전하여 학생들의 취업을 크게 개선할 수 없다고 하는 신호를 감지한 일부 대학들이 자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에서는 비전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아주 상세한 방법론을 담은 하나의 마스터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공학인증은 교육에 있어서의 품질보증기법이라고 주장할 만큼 계량적인데 학생을 제품으로, 학과를 공장으로 대입시키고 있다. 이 방법론에 의하면 단지 지식과 기술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목적과 더욱 심오한 가치에 대한 고려를 무시하는 그 옹호자들의 현실적 경향에 대해서는 얼버무린다. 좋은 의도와 이론을 가졌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방법론으로 인해 실패한 여러 가지들을 시급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학교육개혁 정책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이 그 취지와 목표와 운영 및 관리방식을 가지고 객관성이 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왔으며 그 요소들을 우리 대학의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응용한다면 분명히 바람직한 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추론컨대 좀 더 비판적인 견지에서 현재의 정부, 대학, 산업의 시스템에 의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대학교육의 개혁과 이로 인한 국가의 미래에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10여 년간의 대학교육 개혁을 현장에서 경험한 바 그 성과와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련의 정책들로 인해 대학은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거나 목표와 비전 없는 학사운영에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연구하지 않는 교수는 더 이상 대학에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선택과 집중의 효과로 국제급 및 SCI급 논문의 양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요구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철학이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대학은 독립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산학협력의 파트너로서 존재의식이 형성되었다. 연구와 교육의 전반에 걸쳐 선진국형 프로그램 재원화와 연구 재정의 관리 체계가 수립되었고 투명화되어 사용자 및 관리자 모두의 책무성이 강화되었다.

대학교육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개혁안들이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고 정권인수차원에서 대학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주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부분 이전 정권의 정책방향은 대폭적으로 수정되고 이는 교육현장에서 마치 시험무대처럼 작용하게 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개혁은 반드시 장기 비전과 마스터플랜에 의거해야 한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발전적 계승이 더 요구된다.

정책수립과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책적 이상은 현실에 기반하여야 하며 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책입안 시부터 대학과 경제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문제는 대학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학교 및 산업체와 시스템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해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을 기할 때라야 정부정책이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며 바람직한 통합조정자의 역할, 더 나아가서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배분의 원칙에 있어서 좀 더 헌법적인 정신과 국민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면서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세금을 모두 선택과 집중에 쏟아 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는 재정지원 사업비는 대부분이 교부금의 성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구조적인 불균형 경쟁체제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악한 지방대학에 대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국민의 세금을 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10년 이상 정부의 대학연구재원의 절반 이상을 소위 수도권 명문 7-8개 대학에 집중 지원하면서 양적인 성장 외에 과연 재정에 걸맞은 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소외된 대다수 대학들은 재정에 어떻게 국가 고등교육의 몫을 담당하라는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순위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IMD 대학교육 경쟁력을 보면 10년전 47위 수준에서 2006년도에는 50위, 2008년에는 53위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의 환원주의적 접근을 피해야 한다.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육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초중등교육은 모두 대학입시 문제로 환원된다. 그리고 대학의 문제는 다시 대학교육개혁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러나 대학의 문제는 경제사회 시스템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리 인력시장은 극도로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겪고 있다. 노동시장은 산업시대 구조가 극대화되어 고급직장은 대기업위주로 형성되었다.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은 급여를 비롯하여 매우 열악하다.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개별기업이나 가업을 이어가는 자영업, 소규모 점포사업 같은 것은 갈수록 저소득업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누구나 대학을 가려고 할 것이고 반면 이들이 졸업한 후에는 갈 곳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문제는 일자리와 직결되므로 우선적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산업구조의 균형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

국책사업의 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은 강조되지만 합목적성은 결여되어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그 집행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면 그 사업은 타당하였고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 목표를 이룩하였는가를 분석하여 본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대로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이 되거나, 지역혁신 클러스터가 생기거나,

산학협력이 활성화 되거나, 대학교육이 개혁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상태에서 현 정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demand)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vision)에 대한 합의, 그리고 개혁방법(methodology)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조벽, 1999 : 219-242). 정부의 계속되는 선택과 집중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말미암아 대학들은 주체성과 자율성을 잃어 가고 있다. 정부의 프로그램들이 이름은 바뀌어서 다르게 추진이 되고 있지만 그 평가지표의 내용상 획일적인 정량화 지표들로 말미암아 대학들은 이것저것 따놓고 보자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각 대학들은 평가에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기관·기구들을 하나씩 추가로 설치하는 등 비대화되고 평준화 되어가고 있다. 대학들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줄서기보다는 본래 기관의 설립이념과 그에 따른 발전계획을 우선시 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들은 정부지원에 의한 연명에 급급하지 말고 독자적인 노력으로라도 재정의 건전성, 특성화, 산학협력 등의 근본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그러한 대학들에게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연구지표 위주의 평가연계재정지원방식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학교육의 강조, 그리고 고등교육정책결정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대학 교육현장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교수들은 갈수록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교육보다는 연구에 집중한다. 학생들의 기초수학능력과 탐구정신, 도전정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기초교과목 및 교양 교과목들은 더욱 방만해지고, 마치 교양강좌는 상식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기초가 빈약한 상태에서의 전공교육은 더욱 힘들다. 더욱이 산업현장을 위한 맞춤형 전공교육의 강조는 심오한 기본 원리로부터 나오는 문제해결능력 보다는 잡다한 단순 실무형 인력을 양산케 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는 산업과 기업의 힘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다수의 학부 졸업생들을 주로 하는 조직문화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정책에서 대학원 중심의 연구와 학부 중심의 교육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일련의 정부가 주도한 대학정책에 있어서 그 목적달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의 대응에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함으로써 많은 중복과 모방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대학의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동형구조화현상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사례대학을 통한 모델을 제시하거나, 서열화가 아닌 기능적 분화를 장려하는 특성화를 지원하거나, 정권을 초월하는 마스터플랜을 적용하거나 하기 보다는 제도와 재정 모두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대학들의 정부 의존성을 지나치게 조장하였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줄여나가면서 민간과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도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국가의 먼 장래에 대한 당대의 청사진임을 감안한다면 한발자국, 한발자국을 매우 신중하게 움직여야 함이 마땅하다. 의당 교육의 제도도 변하고 교육과정도 변하여야 하지만 교육을 꼭 ‘혁신’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시간의 시급성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대학교육에 거친 바람을 일으켰던 일련의 국가사업들은 종합하면 제도와 투자는 있었으나 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는 학생, 교수 및 교육과정에 대한 투자나 정책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주도의 재정지원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지표들로 말미암아 대학의 교육과정은 점점 더 학문의 자유 및 학교의 교육이념과는 멀어져 갔으며 학문분야간의 활발한 교류보다는 정책지표에 맞게 구색 맞추기로 진행되다 보니 대학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차원은 고양되지 못했다.

조벽은 우리의 교육정책이 낙오자를 배출하는 정책이었다고 비판하였다(조벽, 2000). 국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좋은 인재가 배출되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훌륭한 시민의 배출이라는 대학의 일차적 기능은 망각한 채, 낙오자는 양산하고 소수의 집단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승패(win-lose)의 전략으로 기울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마련하면 대학은 거기에 맞게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형식-내용의

협동적 개선의 선순환을 기하고 국가장래의 비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연구 논문 위주의 성과주의 지향과 대학들의 학문의 자유 및 교육과정의 편성권에 대한 낮은 자존감 및 경시현상의 공동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는 사이 교육과정은 방만해지고 과편화되고 학습성과는 떨어졌다. 기초 학문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없는 수요지향 또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강조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마케팅화 되어 수요자의 구미에 맞게 포장되어 제시될 뿐, 진정으로 사회경제적 미래 환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데에는 태만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금 대학에서 가르쳐 지고 있는 교과목들이 30년 전 산업화시대에 가르쳐 졌던 교과목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 수요 지향적으로 만들어진 교과목들이라는 것들도 잘 살펴본다면 매우 분업화된 것이요 시효성이 짧은 것들이며 진정한 학문 간의 융합과 같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사례로 제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와 정책수립과 운영방식 및 대학의 교육이념과 발전계획과 학사운영에 있어서, 본질적인 역할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며 그 무엇보다도 교육과정과 교수와 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다.

## 2. 대학교육개혁의 기독교적 고찰

기독교적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인간을 영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측면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며 종교적이고 영적인 자·정·의의 전인적 교육을 추구한다. 인간을 생산과 소비체계가 요구하는 것에 적용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가능성을 진보적으로 여겨 인간 스스로 진리를 구성하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지식과 학문을 가치중립적으로 여겨 통제와 경쟁의 도구로만 보지 않으며 진리와의 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협동을 강조한다. 가치를 개인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의 공

동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 시대의 문제는 더 이상 기독교 밖의 문제는 아니며 올바른 교육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은 점점 더 기독교교육의 공적인 사명이 되어 가고 있다.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이란 복잡하기 그지 없는 인간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이므로 반드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된 교육은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욕망과 더불어 영적이고 초월적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서 다차원적이고 조화로운 전인의 육성을 그 근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이형득, 1990 : 123). 이 세상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과,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된 온전한 인간상을 내용으로 하는 기독교를 통하지 않고는 참 인간성과 참 문화 형성이 불가하다 할 것이다. 기독교적 교육은 인간 지향적이거나, 기술 지향적이거나, 사회 지향적인 교육의 한계점을 진리, 곧 하나님 지향적인 방향으로 비로소 온전케 재건하여 현대사회의 많은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전 절에서 살펴본 정부의 대학교육개혁에 대한 고찰에서는 정부 기관들이 내세우는 수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성과위주의 평가를 비판하고 정부 정책의 합목적성, 형평성 그리고 책무성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입안들이 당시의 대학교육의 배경 및 문제점들은 적시하고 있는 바, 우리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마저 잘못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대형 정책사업들은 대부분 당시에 드러난 분명한 대학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에 기초한 것이었고 그로부터 비전과 목적과 방법론이 제시된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원의 국제경쟁력 부족이라던가 지방대학의 지역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의 부재라던가 고질적인 산학협력의 열약함 등의 문제점들로부터 이를 타결하기 위한 정책입안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10년을 넘게 대학교육정책들이 이어져 오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흐름과 정책들이 고등교육의 개선에 선순환의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대학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

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그간의 많은 정책들은 비교적 정확한 문제인식과 비전 및 목표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었거나, 성과는 있었으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거나 그 추진력을 잃었으며, 현실에서는 교육현장을 왜곡시킨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와 대학 양측에 책임이 공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교육의 좀 더 본질적인 측면,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적 교육의 측면에서 정부와 대학에 주어진 사명과 그 헌신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교육의 본질적 요소는 교수, 학생, 교육과정, 교육의 장이다. 대학교육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자나 정책적 지원을 말할 때는 마땅히 교수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의 질을 높이고 시대적 요구와 설립이념의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의 창의적 개선과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제반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의 일련의 대형 재정지원사업들은 이른 바 이러한 교육철학적 접근법이 아닌 신자유주의 경제공학적 접근법을 취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가로서의 교육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마스터 플랜이었다기 보다는 - 내일 당장 어떻게 바뀔 지도 모르는 - 시장을 모방하는 형태를 취하며 상업적인 표준을 기초로 한 성과주의를 내세웠다. 예를 들면 두뇌한국21사업의 경우 일부 이공계 중심 수혜 대학의 대학원 정원 증원과 국제급 논문의 편수를 사업의 성과와 동일시할 뿐, 원래 사업의 목표였던 국제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누리사업의 경우에서도 수혜대학의 학생 장학금확대와 해외연수 참가 등이 성과로 제시되고 있지만, 원래 사업의 목표였던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형성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교육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투자가 없이는 대학교육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정지원은 좀 더 교육의 본질적 분야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제도와 학풍과 트렌드가 형성되고 하나의 인지도 - 브랜드 - 가 형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독교 세계관적 견지에서 교육의 결과는 성과보다는 변화를, 경쟁보다는 협동



을 더 중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효율과 수월성은 철저하게 그 변화와 협동의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경쟁이 변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협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특히, 발달단계에서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인격형성이 매우 뒤 처진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에서는 경쟁과 성과보다는 변화와 협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육개혁은 교육의 장이 바뀌었는가, 교수의 교수방식이 바뀌었는가, 학생들이 나아가야 할 인재상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학생들이 변화하였는가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평가 또한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개혁의 구체적 내용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 보다는 각 대학에서 훨씬 더 잘 할 수 있으며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며, 따라서 대학교육개혁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학은 설립이념에 기반한 교육적 구현의 자주적인 주체이다. 또한 교육적 구현의 자주성은 반드시 시대적 여건에 기반한 외부적 수요를 비판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균형의식을 찾아 보기 힘들다. 대신, 총장을 위시하여 교수진의 역량과 행정적 역량을 모두 모아 정부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사업을 위한 대학 내의 구조조정이나 교육과정 개편은 당연히 되는 반면,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하거나 학문분야의 발전으로서나 특성화 또는 대학의 설립이념과 장단기 비전에 의한 교육과정 개편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영향력은 대학의 비전마저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코드를 맞추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각 교수 개개인도 연구과제의 수주를 위해서는 정부시책과 코드를 맞추어가야 하는 형편이다. 여기서 연구의 창의성은 블루오션에서의 창의성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집중분야에서의 창의성으로 지극히 제한된다. 달리 말하자면 블루오션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들의 태도는 비단 국립대학들만의 태도는 아니다. 사립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경쟁력이 있는 대형 사립대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지방 사립대학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러한 대열에 서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스러운 지향성은 꼭 정부의 정책적 선도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각 대학들의 자주적 주체성 및 행정적 책무성의 부족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결합된 정책에 대하여 대학은 변화하지 않고 외양만 갖춤으로써 재정지원만 얻으려고 하는 풍조가 있는 것이다. 대학은 철저하게 설립이념과 외부적 수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 추종자가 아닌 -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그러한 대학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은 중앙 정부만 쳐다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와 상생의 노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수도권 대학들이 각 지방에서도 경쟁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들의 대학교육개혁에 대한 대응방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의 수혜자이기에 앞서 정부에게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잘못 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제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기능을 감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교수들의 비판력, 대학들의 비판력, 학문단체들의 비판력, 대학 연합체들의 비판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 현장에서는 그 비판적 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교수들은 대학에, 대학들은 정부에, 심지어 대학 연합체마저 정부의 예하기관처럼 작동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는데 여기에는 법적인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암묵적으로 진행된다. 대학을 위한 교육예산은 법적인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로 국회로부터 예산 심의만을 받는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이 되고 그에 따른 교육적, 행정적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들은 이에 대한 실질적 비판 및 견제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연합체는 정부를 견제하면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식적 기관으로서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좋은 인재를 배출하여 사회와 그 구성원인 기업에 쓰임이 되어야 함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대학교육이 ‘맞춤식 교육’의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가 되는가?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왜 수요창출의 문화적인 사명을 뒤로한 채, 이익이 되는 것이 선하다고 하는 기술주의와 경제주의의 추종자인 기업에 충

성하기 위해 수요지향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기업은 먼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미래를 담보해야 할 교육이 기업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정부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그리고 취업률을 중시하는 경향은 대학 교육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멀리 내다 보지 못하고 당대에만 치우친다면, 심지어는 상업주의적인 표준이나 집권당의 기호에 치우친다면 이는 대학교육에 잘못 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그 후유증마저 커질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잘못된 신호에 의해 과거에 너무 많은 대학들이 생겨났고 양적인 팽창을 겪었으며 그 결과, 고급인력의 극심한 공급의 불균형을 몸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 점은 국내 대학의 학과 또는 전공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다변화와 서비스사회로 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과는 수 십년 전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과목편성은 물론 각 과목의 내용도 30년 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변화된 사회에서는 당장 필요한 전공 지식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스스로 감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문화적 해득력을 겸비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치밀한 뒷받침이 없는 직업교육 중시지향은 우리 나라 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교육의 통전적 역량을 겸비한 인재의 양성이라는 점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학교육인증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교육에서의 대부분의 상세한 사항들이 이미 규정되고 있고 또 현장 평가 시에는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때문에 규정된 방법론에 따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개의성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설립이념과 특성화 등을 위한 종합적 방안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오히려 그동안 특성화 되어서 잘 운영되어 왔던 교육과정마저 공학교육인증의 틀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특성화의 의미를 잃어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학교육인증의 방법론

은 하나의 대안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 나라 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교수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노력을 부가하므로써 오히려 교육 및 연구력에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다.

교육학적 견지에서 보면 교육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요소가 많고 또 학생은 학습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은 교수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통해서 보다는 많은 경우,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더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육의 방법과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반응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볼 때, 최근의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은 고등교육의 교육학적 견지에서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할 대학의 교육과정을 지나치게 성과중심 이나 수요지향, 표준화의 틀로서 평준화하려는 지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 있는 지난 10년간의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들은 장기적 비전과 목표 제시보다는 정권차원의 시급한 처방 또는 가시적 성과지향이었다고 볼 때, 과연 그 속에 교육철학이 존재하였는지 또는 협동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할 대학들을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할 대상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나친 성취중심지향으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 학문과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밝은 미래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협동하여야 할 절실한 대상인 동료 학생들을 내신경쟁, 수능경쟁에 이어서 또 다시 학점경쟁, 취업경쟁, 스펙경쟁으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3. 대학교육개혁의 자주적 대안으로서의 기독교적 지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말미암은 대학교육개혁이라는 도전에 대응했던 지금까지의 방식은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었고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심 축은 바로 정부였음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의 원천은 정부가 사용하게 되는 대규모의 재정에 기인하는 바가 매우 컸다. 정부의 시

책들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타당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론과 여러 수단들에 있어서는 합목적성과 형평성, 장기적이고 지속적 비전, 책무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대학교육의 본질적 개선에 있어서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거나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예견되었고 나름대로의 대안들도 제시된 바도 있었다(강희천, 1996). 본 절에서는 대학의 교육개혁을 기할 수 있는 진정한 축으로서의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의 자율성의 핵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수사회의 역할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학은 진리와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 공동체의 바탕 위에 설립이념과 교육목표의 가치를 기준으로 외부의 요인 즉, 경제사회문화적 요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은 정부든지 기업이든지 외부의 압력이나 유인책으로부터 일정한 경계의식 또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형화 된 정부사업들은 막강한 자금의 영향으로 학문의 자율성, 교수의 자율성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의 평등, 협동 그리고 발달과 성숙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변화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자산은 궁극적으로 정부나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공동체, 인류문화 또는 설립이념의 구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항상 주체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비록 많은 재정적 혜택이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돌아설 수 있어야하고 또 비판의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가 명확한 상황에서 양적팽창기의 산물인 종합대학의 틀만을 고수함으로써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어 놓으면서 강소대학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죽지 않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살기 위한 경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이러한 결단력을 가지려면 대학 스스로도 대학개혁의 이념과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학의 행정 책임자들은 이러한 의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안이한 태도를 보이

고 있다. 국내 대학의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속의 대학으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학 스스로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 연구의 주체는 교수이다. 그리고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동반자가 학생이다. 또한 교육과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정부와 기업이 아니라 배출되어 사회의 일원이 되는 졸업생들이다. 여기서 교수사회의 역할을 정의해 보자면 ‘학생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수는 학생에 민감하여야 한다. 학생의 상태와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학생이 맞닥뜨릴 미래에 민감해야 하고 학생이 취할 가치기준과 삶의 방식에 민감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개혁은 바로 이러한 분야에 맞추어져야 한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교수 충원률을 사용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것들을 가능케 하는 가장 매력적인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곧 교육의 성과로 인정되고 거기서 끝이라는 데 있다. 교육현장에서 볼 때, 가장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바로 강의의 질 즉, 교육의 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수사회는 아직까지 연구의 질은 추구할지 모르나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대학교육개혁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오늘의 대학의 분위기에서는 교육과정은 갈수록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이상 교수들의 경험과 전문성과 역량의 집합체라고 하는 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대형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흐트러 놓고 있다. 서너 가지의 서로 다른 정부사업 때문에 변형되고 끼워 맞추어진 교육과정은 점점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심도 있게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다변화 사회와 지식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영역보다 활발하게 연구하고 교수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만들어 내야 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목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그리고 ‘학생들의

실제경험이 곧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으로 변천을 거듭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화할 것이고 또 변해야만 한다. 이는 교육이 교수와 학생, 교육과정과 교육의 장, 그리고 간학문적(inter-discipline) 방법론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육과정은 먼저 우리가 처한 상황(context)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교육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수와 학생들이 진리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Palmer, 2003). 브루멜른은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준비할 때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점을 상기시켜 준다(Brummelen, 2002 : 719-24). 첫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적·종교적 유산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정상적인 합리적 책임감 속에서 자라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교수는 헌신을 가르치기 원하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교육과정을 정의하는가의 문제는 각각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예를 들어 기독교대학은 교육과정의 의도나 목적에 성경적 세계관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명시적인 진술문을 만들고 진술문이 문서로만 남고 곧 잊혀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학교 내에서 항상 가시화 되어야 한다(Greene, 1998). 예를 들어 어떤 한 과목에 대해서 잘 다듬어진 주제진술문, 학습목표, 핵심질문을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의도된 명시적인 교육과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하는 셈이다. 가령, 막대한 재정적 혜택을 제시하면서 다가오는 정부의 교육과정 정책에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된다.

대학교육개혁에 있어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본질이 변화할 수 있도록 가장 체계적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작동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그 구체적 작업은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인 인재를 양성하게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하여 가장 활발히,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하고 적용해 나아가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교수사회는 교육과 연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나가야 할 분야가 바로 시대와 대학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마

런인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학교육개혁의 정책적 지향은 세계화, 지식사회와 같은 키워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명히 외부에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도 철저히 성과주의와 실용주의적인 방법론에 근거하고 있었으므로 정량적인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대학의 내부, 즉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있었다. 즉, 다가올 다변화된 미래사회에 지도자의 덕목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점점 더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취업률이 강조되고 직장을 잡기 위한 준비로서의 대학생활 이라고 하는 점이 부각될 때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다시 관심의 초점을 내부 즉, 인간으로서의 교수와 학생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와 함께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찰은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적실하다. “대학이 연구를 통해 학문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종교(도덕)의 주변화 현상을 통해, 에토스(ethos)를 상실하여 사회적 참여와 실천에 냉담한 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연구중심대학을 사례로 대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하면서 ‘영역’(world)이 확장되었다면, 질적인 발달을 의미하는 ‘정신’(soul)차원은 위축되고 있다.”(손문, 2007) 교수사회는 효율성과 실용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발현과 진리와 학문의 심오한 추구로부터 가치관의 형성, 책임의식과 협동성을 겸비한 미래 시민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대학교육개혁은 외부의 영향을 수렴하면서도 그 주권은 절대자와 성경에 두고 있으므로 교육의 본질적 측면인 교수와 학생의 관계성에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실한 것이라면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숨겨진 재능과 은사들을 발현하도록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가르친다.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은 교수가 학생들을 위하여 성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모델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가르치도록 한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에 있어서 기독교적 지향은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지적 차원에만 머문 세속적 학문연구의



수월성을, 절대 진리의 가치와 타자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 온전하게 보완하여 주는 전인적이고 통섭적인 것이다.

기독교적 교육은 절대적 가치를 육성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재생산 능력을 준다. 이러한 가치들은 보통 사람들이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에 따라 기꺼이 살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결정적인 것이다(Brummelen, 2002 : 77). 또한 기독교적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의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술은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기술은 사람들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다. 학생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감각과 기술 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대학교육을 통해 현실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외부 세계의 압력으로부터 진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교수와 학생이 협동의 공동체를 이루고 시대적 해안을 가지고 대학교육개혁의 도전에 대응하고 진정한 대학의 변화 즉, 학생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III. 결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경쟁력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고등교육경쟁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고등교육취학률이 70%를 넘는 형편에서 왜 초중등교육경쟁력은 높는데 고등교육경쟁력은 낮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체 교육의 경쟁력은 고등교육경쟁력이 결정한다고 하는 점이다. 특히 교육 선진국들의 대학 졸업자들과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자들을 비교해 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과 해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만약 이러한 여건이 변화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문성과의 질적인 감소현

상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적 대안들은 오늘날 기독교대학들은 물론 모든 고등교육에서 교수와 학생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더욱 교육적 본질에 가깝게 안내해 줄 수 있다.

교수는 학생들이 대학에 머무르는 수 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 양육한다. 그러나 만약 학생의 졸업 후 전체 인생의 향로를 놓고 본다면 그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고작 내가 가르친 것은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미분방정식을 근사하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라고 회고하게 되기를 바라는가?

이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도덕적 상대주의와 진보적인 교육운동의 후풍으로 우리 사회는 목적과 사명에 대한 응집력 있는 인식의 결여와 가치의 혼란기를 맞고 있다. 특히 기독교 전통의 지혜를 보존하고 실현하는 일은 점차 기독교 학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공적인 기능이 되어 가고 있다(Bolt, 1993 : 49-99).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학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수사회라면 대학교육개혁에 있어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드러내는 일은 기독교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학교는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장모델이 진정 교육에 적합한 것일까? 블룸은 현재의 학교는 “시장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능력이 전무한 ‘기술적 잡탕’이라고 주장한다(Bolt, 1993 : 146).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교수들은 기독교 전통의 지혜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액션그룹이어야 한다. 도슨은 “기독교 고등교육의 전통이 계속 존재하는 한, 현대 기술사회에서 세속주의는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다”고 외친다(Bolt, 1993 : 99). 이 시대에 기독교 교수는 주류의 문화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지향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들과 방법들을 가려내고 인간의 모든 다양한 양상들을 이용할 수 있는 통전적 시각을 갖는 진정한 교육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대학은 “거룩한 확장자”로서 사람이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신앙과 학문, 신앙과 문화를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통

합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윤상헌, 2004). 기독교수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상상력을 활용하여 개인적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특히 교육의 현장에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우리 나라 대학교육개혁의 기독교적 고찰을 통해 본 바와 같이, 정부와 대학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대학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일깨우고 개혁해 나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희천 (1996), “대학의 변화 : 그 도전과 대응”, 『현상과 인식』, 20(2), 35-55.
- 고형일 (2006),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희 (2007),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14, 75-99.
- 김병주 (2007), “BK21 사업의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14, 29-50.
- 김안나 (2005), “5·31 교육개혁 이후의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변화와 쟁점”, 『교육정치학연구』, 12(1), 85-109.
- 김희동, 지인영 (2009), “공학교육인증제도의 학습성과와 교양교육”, 『교양교육연구』, 3, 89-103.
- 손문 (2007), “연구중심대학과 기독교 교육”, 『신학논단』, 49, 89-138.
- 신재철 (2007),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교육정치학연구』, 14, 7-27.
- 유현숙, 조영하 (2007), “누리사업 재정지원정책 성과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4, 51-73.
- 윤상헌 (2004), “한국적 상황에서 본 기독교 대학의 의미”, 『통합연구』, 42, 79-102.
- 이형득 (1990), 『하나님 중심 세계관 - 송계 이원설 박사 사유구조』, 서울 : 보이스사.
- 임연기 (2005),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과 쟁점”, 『교육행정학연구』,

- 23(4), 243-268.
- 정일환 (2004), “한국 고등교육개혁의 성과와 전망”, 『비교교육연구』, 14(3), 43-66.
- 조벽 (1999), 『새 시대 교수법』, 서울 : 한단북스.
- \_\_\_\_ (2000), “미국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본 한국의 대학원중심대학 정책과 전망”,  
교육인적자원부 강연, [http : //www.me.mtu.edu/~peckcho/article/moe-pres.htm](http://www.me.mtu.edu/~peckcho/article/moe-pres.htm).
- Bolt, J. (1993), *The Christian Story and the Christian School*, 이정순 역(2006),  
『이야기가 있는 학교』, 서울 : IVP.
- Greene Jr., A. E.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현은자,  
정희영, 황보영란 역(2000),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 CUP.
- Palmer, P. J. (1993),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역(2006),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 IVP.
- van Brummelen, H. (2002), *Steppingstones to Curriculum : A Biblical Path*, 이  
부형 역(2006),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서울 : IVP.

## Abstract

### Assessment of University Reconstruction Programs after the IMF Crisis: A Christian Perspective

Moon-Shik Park(Hannam University)

After the IMF Crisis, in Korea, several remarkable university reconstruction programs have been undertaken with powerful government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ids. Slogans in those programs are such as research-oriented, regional renovatio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university accreditation and selective focusing policy etc. Programs were offered for public application by any institution officially. However, for their viabilities, universities compete for them desperately because the program grants were the only substantial funds for higher education from the government. Actually, authorities have played dominant role on the university reconstructions by setting up nominating criteria based on governmental policies. These programs, therefore, in their slogans, policies and management controls, have impacts on academic curricula that may cause risks on academic education. In this study, not only the effectiveness and critics but also the inherent issues of the programs in regard of academic activities will be suggested and evaluated with respect of Christian world-views. As a consequence, our world university competitiveness is not improved, university curricula tend to be irresponsible or incapable for the university and there was no academic improvement despite the decade-long national university reconstruction programs. In Christian perspectives, higher education is required to be demand-creating rather than demand-driven as a mission

of Cultural Mandate. Moreover, Christian curriculum directedness can be an alternative direction in our university education and its vision is presented.

Key words : university educational reconstruction, university curriculum, university's autonomy,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education-directedness